

'98 전력산업 정책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서기관 유재열

1. '97 전력산업 정책의 평가와 반성

우선 '97년의 전력산업 정책을 평가, 반성하고 '98년 전력산업 정책의 대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장단기 전력수급 안정 도모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하계전력 수급의 공급예비율은 7%를 목표로 하였다. 한국 전력의 수요관리 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96년 440억원이었던 수요관리 사업을 '97년 540억원으로 확대하여, 빙축열 냉방 및 요금 구조개선 등 부하관리 부문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등 효율 향상에 투자하여 신규전력 설비투자비 8천억원을 절감하였다.

월성 원자력 2호기 등 17개 발전기의 차질없는 준공을 통해 하계전력 예비율 7.3%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준공될 일부 발전소 건설은 민원 등으로 인해 지연되기도 하였다.

'95년 수립된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보완하여 '97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IMF 금융지원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립시기를 '98년 3월

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경쟁력 향상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97년 6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자발전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확보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98년 1월 중에 2차 민자발전 사업자를 계획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공사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허를 단일화하고, 영업구역 제한 및 면허 유효기간(5년) 등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은 건설관련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98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외개방에 대비한 원자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96년 12월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 설계사업과 핵연료 설계사업을 전문업체로 이관하고 구체적인 양수·양도를 추진하였다.

북한 경수로 사업은 '97년 1월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97년 6월 재정외무 불이행시 조치 의정서가 타결되고, 7차례의 부지조사를 실시하였

고, '97. 8 부지준비 공사 착공식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 전력 협력사업의 첫 삽을 떴다. 앞으로 총 사업비 및 재원분담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차질없이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소비의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전기요금은 소비절약과 적정 투자 보수를 확보를 위해 7월 1일에 5.9% 인상하였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전기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처리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 철저

안전 검사의 철저한 시행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 안전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상주대행 대상을 1,000kW 미만 시설에서 전 시설물로 확대하였다.

라. 전력산업관련 제도개선 추진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개발 확충의 기반을 마련했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한국 전력공사가 전담토록 하고 전기사업자의 전력부문 기술개발 확충을 권고하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및 발전소 입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였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 지원금을 앞당겨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하였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을 개정하였다.

2. 국내의 여건변화 및 전망

가. 대외적 여건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97년 1월 국내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전력설비, 발전소 건설부문이 개방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제품은 국제입찰을 하게 되었다. OECD에 가입하게 되어 최근 다자간투자협정협상에서 전력사업의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선진국의 전력사업 시장 진출이 전망된다.

반면에 국내기업의 해외 전력사업 진출도 증가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KEDO의 북한 경수로 건설에 한국의 주도하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한편 한전 등 전력협력사간 공동으로 필리핀, 인도, 중국등 동남아시아의 발전소 건설·운영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국가적 특성에 적합한 전력산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또는 에너지자원 부국은 공급능력 여유에 따른 사업효율화, 소비자 보호 및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설비 확보 및 부족한 투자비의 해외조달을 위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전력, 가스, 통신 등의 네트워크사업분야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유틸리티 기업간 인수·합병이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 중이다.

나. 국내 여건

IMF 자금지원 등 변화된 경제여건이 전력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 금융지원 합의에 따라 경제성장이 3% 수준으로 하향 권고 되었으나 전력수요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 전력산업구조개편, Slim화 등의 강력한 추진이 전망된다. 기업부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체납이 증가될 것이다. 물가상승율 5% 이하 안정기저 시책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억제가 전망되나 환율, 유가인상 등의 여건 감안시에 요금 현실화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참고로 멕시코의 경우 IMF 금융지원후 전기요금이 20% 인상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등의 추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NIMBY 현상에 기인하는 발전소 입지 확보난이 심화되고 있고, 한편 전력회사는 SOx, NOx, 粉塵저감설비설치를 추진 중이다.

정밀기계, 전자, 통신 등의 산업 비중 증대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 전기공급,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전이 통신, 방송등의 비전력사업에 진출하고, 반면에 발전사업에 민간의 경쟁을 도입하고, 특정 전기사업과 전력직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다. 문제점

전기의 과다한 소비가 문제다. 에너지를 97% 이상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너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 및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설비 확충의 어려움이 점증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전력설비 기피현상,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전력설비 입지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지방화, 개방화, 경쟁체제에 맞는 지원기반이 미흡하다. 한전이 독점공기업으로 공익성과 기업성을 견지해 왔으나, 앞으로 전력사업 환경은 한전도 여러 전력사업자중의 한 위치로 되는 변화를 말고 있다. 일반전기사업자의 공익성이 이완되는 반면, 기업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등 공익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민자발전의 확대, 발전사업자의 직판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급전망 능력 확충, 전기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공익성 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공급사로서의 한전에 기술개발 투자, 전기 수요관리 투자 등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전으로서도 공익적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효율기기 개발 등 수요관리, 전기사업자를 위한 인력양성, 표준화, 정보화사업, 전력프랜트 수출 등 전력사업 기반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전원입지의 안정적 확보 지원이 부족하다.

남북한 및 동북아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한 전력설비연계 방안 및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 동북아 송전선 연계를 통한 부하관리 및 전력유통 도모를 위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3. 전력정책 방향

기 본 원 칙

- 시장경제 원리 견지
-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
- 산업진흥과 공익규제의 균형 유지

목 표

- 환경보전의 바탕위에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 전력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기 본 방 향

- 전기 절약 및 수급안정
-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 전력산업 구조개편
- 에너지·환경 조화
- 전기 안전사고의 예방
-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 전력산업 기반조성

4. '98 주요 전력정책

가. IMF 체제하의 장단기 전력수급 안정도모

'98년 경제성장률 3%, 에어컨 보급 등의 추세

를 반영시에 '98년 하계 전력수요는 7.2% 증가가 예상되어 수급안정 대책이 긴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후변화협약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기전력 수급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

'98년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해 '수요관리 및 공급능력 확충으로 공급예비율 7%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진 원전 3호기 등 14개 발전기를 6월이전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16개소에서 운영중인 열병합발전소를 시화 염색공단, 진주 상평공단 등 4개소에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 고효율기기 보급지원 등 각종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최대수요를 절감하고자 한다.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제도의 운영을 강화한다. 대상품목의 확대, 효율기준 상향조정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판매금지를 강력히 추진한다. 수요관리투자를 '98년에는 63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급자의 투자규모를 2003년까지 매출액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절약전문기업과 연계한 수용가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을 대폭 확대한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고효율기기 사용 의무화 및 연간 전력사용량 1천만kWh 이상의 85개 다소비 건물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절전을 위하여 내온사인, 전광판 등의 사용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사용을 위한 조정·명령』을 '98년 1월 5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중심으로 '98년 하계전력 수급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세부수급 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보완중인 장기전력수급계획('97~2015) 수립시에 반영할 주요내용은 경제성장을 등 수요예측관련 주요 경제지표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등 수요관리 시책을 강화하고, 원자력 및 LNG 발전소 건설확대 등 CO₂ 배출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수요 재전망

에 따른 발전/송배전 설비계획을 재조정한다. 동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설비 건설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발전원별 경제성 제고 및 민전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장기전력수급계획 시안 작성후 공청회 및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후 3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국제유가 및 환율 등 전기요금의 변동요인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료비 연동제 등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98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6.5% 상향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하여 2000년까지 OECD 비산유국 평균요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전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사전에 정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닐하우스등 취약지역 수용가의 비상발전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배전자동화를 통한 정전의 피해 최소화 및 복구시간을 최단화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압의 자가용 전기설비는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안전공법을 반영하여 전기설비 기술을 개정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재정확충을 지원하여 전기안전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전력산업 참여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한전도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슬립화 등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출한 비전력 사업분야인 정보통신, 방송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고, 건설관리 기능을 축소하고 턴키베이스 프로젝트 발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특정 전기사업제도 도입 및 자가발전 사업자의 전력 직공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특정 전기사업제도란 일정한 사업구역(지점)내에서 전기를 발전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배전하는 소규모의 전기사업자이다. 전력 직공급 범위 확대는 자가발전 사업자의 전력직접 공급범위를 일정한 지역안에서 직접 타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8 상반기까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특정 전기사업 및 전력 직공급 범위 확대 방안을 반영할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영국형, 프랑스형, 미국형, 일본형 등 4개 유형을 검토한다. 한전의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개편방안이 있다. 한전의 발전, 송전, 변전 및 영업부문을 분리,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등을 검토한다. 전력산업 부문에서의 동등한 경쟁추진 여건을 확립한다. 민간의 전력산업 참여에 따른 한전과의 동등한 경쟁여건 도입, 송·배전망의 개방에 따른 전력공급 관리체계의 구축,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독립규제기구 설립방안 등이 심도있게 검토된다. '98. 10까지 종합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다. 원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수출산업화 유도

교토 기후변화협약 체결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의무화 되어 우리나라도 규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경제적인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이 불가피하다.

현재 가동중인 12기의 원전은 총 발전설비의 25%인 10,316천kW에 달하며(발전량 기준 약 34%) 추가로 6기 5,400천kW의 원전이 건설중에 있다. 한편, 국내 원전건설과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원전 예방 정비의 철저 및 장·단기 고장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로 원전 안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감축 및 영구 처분장 확보 등 저장·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원전기술의 완전자립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고도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기 개발된 100만kW급 한국표준형 원전기술(경수로)을 고도화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보다 향상된 130만kW급 차세대 원전개발을 적극 추진('92~2001)한다. 원전기술의 저변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민자원전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라. 발전소건설 입지의 안정적인 확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0년

까지 5,7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추진(발전소건설 입지소요 44개소)할 계획이다. 소요 입지중 25개소는 이미 확보 하였으며, 나머지 19개소는 발전소 건설시기를 감안하여 확보 추진하여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97년 695억원의 지원금을 '98년에 1,283억원(588억원 추가지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및 중앙 정부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원전주변 거주제한 지역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민원을 해소한다. 환경 친화적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탈황설비등 선진수준의 각종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지역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사업에 호의적으로 협조하는 지역과 그러하지 아닌 지역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전력설비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요금수준을 낮게하고, 반면에 설비가 적은 지역은 요금을 높게 운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적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마. 전력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조성사업에 한전이 4,098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력사업에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전력기술개발, 전기안전관리등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전력분야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진국과 같이 전력, 통신 등의 네트워크사업의 통합 추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통합 하부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배전자동화, 자동검침 및 CATV 등에 활용할 CATV망을 전국적으로 구축중에 있다.

전력관리기술법에 따른 제1차 전력기술진흥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의 주요 골자로는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기기, 전기절약기기 및 고효율전력설비 등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한전,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역할분담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5천kW 용량의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건설을 위해 400억원을 투자한다. 대체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는 한전이 전기절약 벤처 중소기업 창업과 구매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등 전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전기절약기기 개발, 전기안전관리 강화, 기술기준 제정, 인력양성, 통일대비 전력사업 등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기요금 인상분, 전기사업자의 출연 등으로 공익재원(가칭 “전력산업촉진기금”)을 마련하고 기관별 업무추진 체제를 수립한다. 일본의 경우 전기사업촉진세법에 의해 전력판매 kWh당 0.445엔을 적립하여 기술개발, 지역 지원사업 등의 활성화에 쓰고 있다.

CATV망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한전 CATV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배전자동화 및 자동검침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양질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2010년보다 10년 단축된 2000년 초까지 4조원의 예산으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 남북 연계방안 검토

현재 진행중인 남북전력 협력사항으로는 북한

경수로사업이 진행중이고, 장기전력 수급계획상 2000년초에 약 1~2%의 예비전력을 확보중이다. 북한 경수로 원전사업은 미국, 일본 등 관계국이 재원부담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심적 역할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원을 분담하되,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남북교류를 위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동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재원이 중요한 문제로서 전술한 가칭 “전력산업추진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동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의 통일 외교적인 시각에 보조를 맞추어 현실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 전기사업법 개정

특정 전기사업제도 도입, 전력 직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에너지로 개발된 전기의 한전 구매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전력사업기반조성을 위한 전기사업추진지원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방향은 특정 전기사업제도의 관할구역은 지점(건물단위)으로 추진하되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전력 직공급 범위는 동일구내로 한정된 것을 자가발전사업자가 일정지역내에서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체에너지로 개발한 전기를 전량 일반 전기사업자가 구매를 의무화 하도록 한다. 전기기술개발 등 사업내역, 재원조달 장치를 마련한다.

아. 전력 기술관리법 개정

기술개발 촉진 및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제도 도입을 위해 동법을 '96. 6에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법령 시행중의 문제와 기업규제 완화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필요하다. 건축 관련법률과 감리부분에 대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설계업, 감리업 외에 전력시설물 진단업을 신설하고, 기술사·설계사의 설계영역 조정, 일괄하도급 제한조항 신설 등을 한다.

자. 전기 공사업법 개정

국내 전기 공사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면허체계와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97. 5 규제개혁회의 의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기공사업 면허 단일화 및 영업구역 제한을 철폐한다. 면허 유효기간(5년) 폐지 및 수급 한도액 제한제도를 개선한다.

차. 전기 설비기술기준 개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다. Cable Tray 이용 시공 공법 관련기준을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지하공동구에 저독성난연 전선 사용을 의무화 한다.

전기사업법은 '98년 상반기중 개정 추진하고, 기타 법령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